

벼랑끝 민주당

해과제

변화·혁신…‘死即生’ 각으로 시대와 소통해야

<사족생>

계파싸움 지속 땐 새 정치 흐름에 해체 위기 맞을 수도

민주당은 회초리 투어에서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비대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전열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비대위 산하의 대선팽가위원회와 정치혁신 위원회, 전당대회 준비 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헌트려진 민주당의 근간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방은 그리 밝지 않다. 비대위가 꾸려졌지만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동력이 취약하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 각 계파는 대

선 패배 평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전당대회 률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물밀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적극적 공감대보다는 분열과 반복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비대위가 본격 가동된다면 당내 분열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오히려 당 안팎에서는 미국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자체 동력으로는 내부 개혁이 어려운 만큼 ‘새 정치’의 상징인 안 전

교수 귀국과 함께 이뤄지는 야권발 정계개편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안 전 교수는 이르면 3월이나 4월 사이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호창 의원(무소속)이 최근 미국에서 안 전 후보를 만난 뒤 ‘안 전 교수의 귀국은 준비가 돼서 오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리해보면 대선 패배의 후폭풍에 휩싸인 민주당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이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위기 타개책은 이

미 제시된 바 있다.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4일 비대위 출범과 함께 “민주당은 60년 정통 애당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일체의 기득권이나 정치 생활에 연연하지 않고 사즉생(死即生)의 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이 밝혔듯이 계파 정치, 기득권, 노선, 정당 문화 등 깊은 부위를 스스로 도려내지 않고는 민주당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변화 없이는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시대적 흐름에 민주당은 정치적 해체라는 극단적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약 폐기 주장 도리 아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둘러싼 속도조절론이나 수정보와 관련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공약 사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정성을 다해 만든 대선공약에 대해 지키지 마라, 폐기하라든지,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리 형편이 어지러워진다고 주장한다”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것은 정부 업무보고조사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전날 “개별 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거나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인수위가 정책과제를 결정하는 단계를 언급한 대목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마치 공약을 수정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인수위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키기 어려운 일부 복지공약은 수정·폐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수령액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수령 대상자 확대를 폐기하는 방안과 암·심혈관·뇌혈관·희귀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무료진료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인수위의 이날 공약 사수 의지의 표현은 업무보고 때 박 당선인 공약 이행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보인 일부 정부 부처의 태도에 대해 재차 경고의 목소리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공약 수정 가능성에 대해 “박 당선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처럼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기초노령연금 20 만원과 군복무기간 단축,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주요 공약을 한 달도 안 돼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약속 위반의 길을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정타령, 현실타령으로 공약을 용도폐기시키고 박 당선인을 깔들이려는 관료와 보수언론의 흔들기에 밀리는 것이라면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보안당국으로부터) 대변인 미디어지원실 쪽으로 오늘 오전에 (이러한 내용이) 연락이 왔다”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와 컴퓨터 백신검사를 통해 비밀번호와 컴퓨터 백신검사를

인수위 ‘북한 해킹’ 소동

“북한이 기자실 해킹” 발표했다

한 시간 만에 “확인 못했다” 말 뒤집어 논란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인수위 관계자는 한 시간 후에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 소행은 전달받는 과정에서 기자실이 (해킹) 방지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원인은) 확인을 좀 더 해야한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기자실은 KT에서 선을 바로 끌어와 쓰고 있으니 해킹 보안당국에서는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패스워드를 자주 바꾸고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 방지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자들이 “북한 소행이란 것은 확인이 안 됐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며 “그래서 내가 비공식적인 말이라고 했잖나. 나는 여러분이 일단은 (해킹) 방지부터 하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안 브리핑에서 “내용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다”며 “해킹 흔적이 없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기자실이) 해킹 시도 등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는 말로 유추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기자실이 해킹당했는지, 만약에 당했다면 북한의 소행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윤 대변인은 해킹 시도가 있었거나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국가보안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다”고 답했으며, 해킹 여부를 묻는 재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드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북한이? 17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관에서 언론사 기자들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인수위 기자실 내부 북한 측 인터넷 해킹 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럼, 능력껏 고꾸라져 봐야 …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 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 的 차만 납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 が 만든 名茶 를 권합니다.



제품문의 : 광주 차생원 :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 02)730-2983 · 부산 차생원 : 051)256-7007-8